

[기획] >> 2면
채식주의자의 대학 생활

[심층] >> 3면
20대 대학생의 저조한 정치참여율

[학술] >> 9면
'n번방' 신상공개, 관련된 법적논점

[인물] >> 12면
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 김은경



코로나19에 부딪힌 우리학교 유학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세계 각국의 학교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대부분 학교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면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등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해 1학기의 △교환프로그램 현황△유학생의 상황△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우리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허용 우리학교 한국어교육과 교수, 방탄소년단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런 코리아 워드 BTS' 타이틀 화면 (출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허용 우리학교 한국어교육과 교수(이하 허 교수)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손잡고 '런 코리아 워드 BTS(Learn Korean with BTS)'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영상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로 허 교수와 한국어콘텐츠연구소(KOLCI)가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했다. 특히 허

교수는 연구책임자를 맡아 콘텐츠 전반을 감수했다. 총 30편으로 구성된 해당 콘텐츠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해외 소비자가 쉽고 재밌게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는 지난달 24일 온라인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최초로 공개됐으며 매주 월요일 오후 9시에 새로운 에피소드가 게시될 예정이다.

허 교수는 △우리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원장△우리학교 한국학 센터 원장△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다수의 언어학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16년엔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됐다. 이후 2018년엔 학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되는 '마르퀴즈 후즈 후 알버트벨스 평생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이문일공필, '독립출판 프로젝트' 게시

우리학교 문화상점 이문일공필(이하 이문일공필)이 '독립출판 프로젝트' (이하 출판 프로젝트)를 개최한다. 지난달 17일, 이문일공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출판 프로젝트 관련 일정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저작물을 갖고 있지만 방법을 몰라 출판하지 못했던 우리학교 학생 및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문일공필은 네 차례의 수업을 통해 참가자에게 출판 관련 기초 지식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참가자는 출판사를 등록해 도서를 출판할 수 있다.

이문일공필은 출판 프로젝트를 통해 △도서 홍보△이문일공필 서점 입점 및 판매 지원△인당·탑당 도서 제작비 최대 165만원△활동증명서 발급 등을 지원한다. 이문일공필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주민 및 청년의 창업과 판매를 매개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로 하여금 재개발로 침체돼 있는 이문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선 강영규 대표(강 대표)가 강의 맡게 됐다. 강 대표는 현재 해방촌에서 독립

출판서적 전문 서점인 '스토리북앤필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 대표는 △독립출판 팟캐스트 '스몰포켓' △독립출판매체 '퍼블리셔스테이블' △해방촌 심야책방 등을 통해 독립출판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출판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은 이번 달 26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이번 달 28일, 합격자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부터 본격적인 강의 및 활동이 시작된다. 강의는 △출판물의 방향성△출판물의 배열△가제본 완성 및 유통△서지정보 작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문일공필은 공지를 통해 "서울시 주소지로 면세사업등록이 불가능한 사람은 참가가 제한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출판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문일공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판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문일공필 공식 홈페이지(www.imun107.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중소중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 kotra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KOTRA가 되겠습니다.

무역·투자의 모든 것,
KOTRA와 상담하세요!
☎ 1600-7119
전 세계 129개 무역관이 도와드립니다.

바이어 발굴 해외투자 진출
수출애로 상담 투자유치 지원
해외시장 조사 해외출장 지원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투자 종합 상담 ☎1600-7119

채식주의자의 대학 생활, 수월할까?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비거니즘(Veganism)을 추구하고 있다. 비거니즘은 동물로부터 유래한 모든 것을 반대하는 생활 방식을 일컫는다. 지난달,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이하 설캠 총학)'는 이런 사회적 흐름에 따라 '이문동

비건지도 제작 사업(이하 비건지도 사업) 시작을 알리며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권리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학교 채식주의자 학생의 대학 생활이 실제로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자.

◆채식주의 유형과 계기

채식주의자는 섭취 식품에 따라 △폴로(Pollo)△페스코(Pesco)△락토(Lacto)△오보(Ovo)△락토-오보(Lacto-ovo)△비건(Vegan)으로 분류된다. 이중 폴로·페스코는 식물성 식품을 포함해 △어류△난류*△유제품을 먹는다. 다만 모든 종류의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페스코와는 달리 폴로는 닭·오리 등 일부 육류를 섭취한다. 다음으로 △락토△오보△락토-오보는 '락토'와 '오보'의 의미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라틴어로 락토는 우유, 오보는 달걀을 의미한다. 따라서 △락토는 유제품을 포함한 채식△오보는 난류를 포함한 채식△락토-오보는 유제품·난류가 모두 포함된 채식을 한다. 마지막으로 비건은 동물에서 비롯된 모든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펑소엔 비건이지만 유동적으로 육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과 스과일스견과류△씨앗만 섭취하는 프루테리언(Fruitarian) 등 다양한 유형의 채식주의자가 있다.

이광조 한국채식영양연구소장은 "△기후변화△동물해방△의료비 절감 등의 이유에 따라 채식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4일간 실시한 외대학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학교 채식주의자 학생도 대체로 △건강△동물보호△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채식을 시작했다.

◆채식주의자 학생은 소외된 학생 식당

학생 식당(이하 학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해 다수 학생이 이용한다. 우리학교는 설캠 인문과학관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기숙사(HUFS Dorm)△어문학관△후생관에서 학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채식주의자 학생은 학식 이용이 어렵단 목소리가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양 캠퍼스 학식에서 판매한 140여 개의 중·석식 주메뉴 분석 결과 육류 미포함 메뉴는 30여 개로 약 20%에 불과했다. 육수를 사용했거나 어류 및 해산물이 포함된 메뉴를 제외하면 남은 메뉴는 산채비빔밥뿐이다. 이에 이보현(국제지역·인도 19) 씨는 "채식주의는 본인의 선택이므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비건 메뉴를 도입하면 확실히 채식주의자 학생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식단표 성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길 바란다"는 응답도 있었다. 기존의 식단표를 통해 메뉴 성분 확인이 가능하나 육류와 일부 재료만 한정적으로 기재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설향 설캠 인문과학관 학식 영양사(이하 이 영양사)는 비건 메뉴 도입에 대해 어려움을 표했다. 이 영양사에 따르면 하루 최대 4,000명이 인문과학관 학식을 방문하며 그중 2,000명이 중식을 이용한다. 이에 "주메뉴 배식구가 2개뿐이라 비건 메뉴 도입 시 배식구 한쪽에서만 사람이 몰려 회전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동시에 이 영양사는 이전에 임시로 채식 메뉴를 도입한 바 있지만 수요가 적어 실패했던 경험을 거론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교수회관에서 수요일마다 채식의 날을 실시했으나 해당 날만 판매량이 급감했다. 또한 본관 스카이라운지에서 판매한 샐러드는 하루에 두세 개밖에 나가지 않아 남은 채소를 전부 버려야 했다. 이를 비취 이 영양사는 인문과학관 학식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예견했다. 또한 식단표에 전 성분을 기재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영양사는 규정상 전 성분을 기재해야 한단 의무는 없으며 많은 학생이 궁금해하는 육류 함유 표기가 최선이라 밝혔다. 또한 △가격△배식 시간△열량 등 식단표에 적어야 할 정보가 이미 많다고 덧붙였다.

채식 메뉴 도입이 어려운 건 글캠도 마찬가지다. 임은정 우리학교 글캠 생활협동조합 식당 팀장(이하 임 팀장)은 식수와 가격 문제를 언급했다.

폴로 (Pollo)						
페스코 (Pesco)						
락토 (Lacto)						
오보 (Ovo)						
락토-오보 (Lacto-ovo)						
비건 (Vegan)						

▲채식주의 유형

첫째로, 글캠 학식은 세 군데로 식수가 분산돼 자원이 한정적이다. 여기에 기숙사 입소 인원이 2,300명으로 늘어나 어문학관과 후생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임 팀장은 "지난 학기 후생관 학식 이용 학생이 하루 평균 1,000명 내외였다"며 "채식 메뉴를 제공하기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채식 메뉴 도입 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다른 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채식 메뉴는 모두 6,000원 이상이다. 이에 우리학교의 현재 대부분 학식 가격이 4,000원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재학생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팀장은 "지속적으로 채식 메뉴가 요구되고 학교 측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문동 비건지도 제작 TF팀 모집공고

◆총학생회의 채식주의자 복지 사업 현황

자체 설문조사에서 '대학 생활 중 채식주의자로서 받아본 복지가 있는가'란 질문에 설캠 총학의 간식사업 때 비건 간식을 받았단 답변이 가장 많았다. △과학생회△단과대학학생회△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시험 기간마다 간식 사업을 진행한다. 각 학생회별로 비건 간식 제공 여부는 다르다. 그러나 제공될 경우엔 대체로 일반 간식의 10분의 1 비율로 비건 간식을 준비한다. 이에 대해 이영우(LD·LD 16) 설캠 총학 인권연대국장은 "앞으로의 간식 사업에서 항상 비건 간식을 구비할 것이라고 확언할 순 없다"고 밝혔다. 설캠 총학은 외부 식당에서 협찬이 들어온 간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건 간식 제공 여부는 불투명한 것이다.

지난달, 설캠 총학은 비건지도 사업 계획을 알렸다. 비건지도 사업 TF(Task Force)팀은 설캠 상권 내 △식당△주점△카페를 대상으로 채식 메뉴를 조사해 6월에 명단 및 지도를 배포할 예정이다. 조영지(LD·LD 19) 비건지도 TF팀장(이하 조 팀장)은 통화 및 방문을 통해 전 메뉴 식품

성분, 특정 재료 제외 조리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문 비건의 목소리'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지속해서 의견을 받을 것이라 전했다. 조 팀장은 "△건강△신념△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 식품을 먹을 수 없거나 먹지 못하는 모든 식이 소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기획했다"며 "단체 행사에서 식이 소수자의 권리가 당연하게 고려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림(LD·LD 18) 씨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복지가 필요했는데 비건지도 사업이 첫걸음을 시작한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밖에도 설캠 총학은 매점과 학식에 비건 메뉴를 구비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글캠에서 진행하던 비건 복지 사업은 없었다. 이에 박장원(자연·화학 17) 글캠 총학생회장(이하 박 회장)은 "선거를 준비하며 비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다. 학식을 관리하는 생활협동조합에 비건 메뉴를 건의했으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실제 정책으로 발전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박 회장은 여전히 해당 사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비건지도 사업에 대해선 글캠 주변엔 지도를 만들 만큼 비건 식당이 많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가 많다면 고려해보겠다 의사를 드러냈다.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트렌드모니터의 2018년 채식주의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취향이다 66.8%△건강에 도움이 된다 60.8%△음식 먹는 것에 윤리 문제 거론은 과하다 53.8%의 결과가 확인됐다. 이는 채식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이나, 윤리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단 양면성을 보여준다. 또한 채식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 단 입장도 존재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양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점과 육식을 비윤리적인 행위로 취급해 타인에게 눈치를 준 점이 그 이유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채식주의자를 식이 소수자로 칭하며 주목하는 것은 과하다"며 "불편함은 있겠지만 성 소수자나 유색인종과 비교해 크게 차별받는 부분은 없다"고 채식주의자 관련 사업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채식주의는 새로운 사회 동향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채식연합은 2018년 우리나라 채식 인구가 약 150만 명으로 2008년에 비해 약 10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학식에 비건 메뉴 도입을 성공한 대학들이 있다. 서울대학교와 동국대학교는 학식에서 채식 뷔페를 통해 비건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국민대학교 학식은 비건 메뉴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는 "많은 학생으로부터 채식 메뉴 도입 지지를 받았다"며 "생활협동조합과의 회의를 거쳐 앞으로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건 간식을 제공하는 학교도 증가했다. 지난해 기말고사 간식 사업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유제품이 함유되지 않은 아몬드 우유와 포도당 사탕 240인분을 따로 준비했다. 또한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야채 주먹밥을 별도로 마련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학교에서도 채식주의자 학생을 위한 변화가 찾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난류: 조류가 낳은 알을 이르는 말

20대 대학생의 저조한 정치참여율, 그 원인은?

활발한 학생운동을 전개하며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 20대의 정치 참여 투표율은 저조하다. 실제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대통령 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의 20대 투표율은 전체 연령 평균 투표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이번 달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0대 대학생의 정치참여 현황△문제 파악△우리학교를 비롯한 학생사회의 정치참여△정치 분야에서 대학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20대 대학생의 정치참여 현황

현재 20대 대학생은 정치참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공청회 참여△국가 기관에 의견 제기△선거△시민단체 활동△집회 및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중 선거는 중요한 정치참여 방법 중 하나다. 정치참여 여부는 투표율을 통해 반영되는데 20대의 선거 투표율을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저조하다. 일례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체 투표율은 58%를 기록했으나 이 중 20대의 투표율은 52.7%로 평균을 넘지 못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노년층의 투표율은 60%에서 70% 사이로 청년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17년도 제19대 대선 또한 20대 투표율이 여전히 50대 투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청년층(20·30대)이 중·노년층(50·60·70대)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비교적 낮은 20대 투표율에 대해 원지유(서양어·네덜란드어 19)씨는 청년이 느끼는 정치와의 거리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필수 교육과정에 △경제△역사△정치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학생이 정치에 대해 접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기회가 부족하다”며 청소년 대상의 정치교육 부재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20대 대학생의 저조한 정치참여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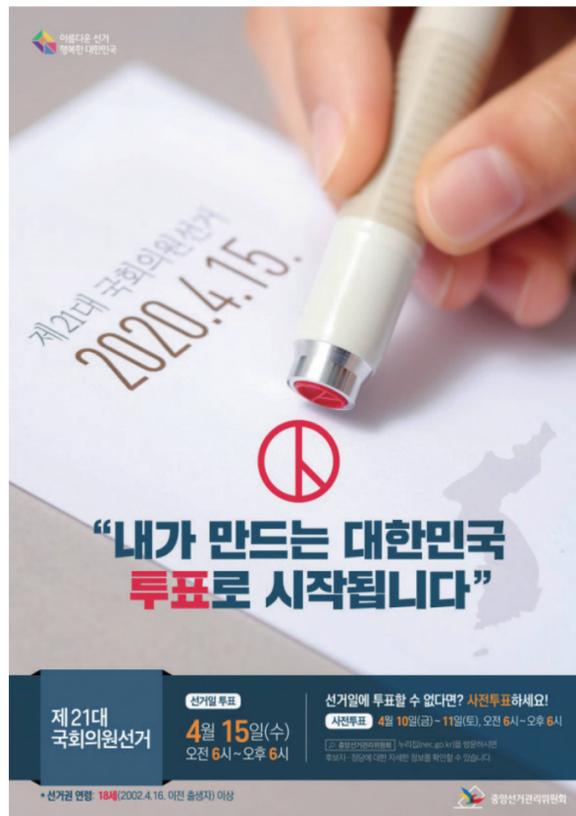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총 3일간 외대학보는 14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대 대학생의 정치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대의 정치참여율이 저조한가’란 질문에 88.4%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외에 △정치 참여로 현실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에 대한 ‘낮은 기대감’ 30.6%△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이분법적인 정치적 지형’ 12.7%△‘청년 대상 정책과 공약의 부재’ 7.5%가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응답에 따르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의원 세대교체△정치 교육 진행△청년 대상 공약과 정책 비중 확대△청년 정치 공론의 장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현재 저조한 20대 정치 참여율의 주된 원인은 무관심이다. 김나연(통번역·영어 19)씨는 “현재 정치권에서 20대 대학생은 철저히 배제돼 있고 이는 정치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바라보게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20대는 없으며 30대는 2명뿐이다. 반면 50·60대 의원은 279명으로 총 국회의원의 93%를 차지한다. 이런 20·30대 국회의원 부족은 청년을 위한 정책 부재로 이어진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1만 5,679건 중 청년 정책 관련 법률안은 66건뿐이다. 이 중 통과된 법안은 단 1건으로 국회의 표결이 아닌 국회 운영위원장 권한으로 통과됐다. 사실상 제20대 국회에서 처리한 청년 관련 법안은 없는 것이다.

◆우리학교를 비롯한 학생사회의 정치참여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은 △4·19혁명△5·18광주 민주화 운동△6·10민주항쟁 등 수많은 민주투쟁을 벌이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다. 특히 학생사회는 독재정권에 대해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60년 3·15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중·고등학생의 산발적 움직임으로 시작했다. 이후 고려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시위를 전개했고 학생이 중심이 돼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벌어졌다. 과거 우리학교 학생사회 또한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치참여 활동을 전개했다. 6·10민주항쟁 당시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3,000여 명의 학생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1,200여 명의 학생이 삼민광장에 모여 ‘6·10 국민대회 외대 출정식’과 ‘6·10 국민대회

1차 외대 출정식’에 참여했다. 또한 2016년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엔 △스웨덴어△스페인어△영어△중국어△프랑스어 등 총 10개 국어로 작성된 ‘2016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 규탄 시국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번 달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재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 (이하 설캠 총학)는 이번 달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먼저 설캠 총학은 전입신고 방법을 공지했다. 실 주거지와 서류상 주거지 일일회를 통해 해당 관할구의 주민 자격을 얻으면 지역 후보자에 대한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 대응해 △설캠 총학△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무빙’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권한대행 ‘S:with’은 공동으로 프로젝트 ‘동대문구, 청년 사이로(4.15): 총선, 청년의 물음에 답하라’를 기획했다. 세 대학 총학은 동대문구 갑 국회의원 후보자 6인에게 공동 요구 질의서를 전달하고 각 후보자의 답변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문화△인권△안전 등 6개 부문의 학생 요구안 세부 사항을 게재하고 이에 대한 학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기존에 계획했던 학생과 함께하는 △간담회△공청회△토론회 등의 오프라인 대중사업은 취소됐다. 그러나 각 후보별 세 대학 총학과의 개인 간담회와 서면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 당일에도 투표 독려 캠페인이 실시된다.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단체 또한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응을 위한 대학생·청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전대넷은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50개의 요구안이 담긴 질의서를 정당별로 발송했고 지난달 30일, △기본

소득당△노동당△녹색당△민중당△정의당 총 5곳이 답변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행동은 각 정당의 청년후보들과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동대문구, 청년 사이로(4.15) (출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

◆대학생의 정치참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됐다. 따라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 18세 유권자는 53만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2%를 차지한다. 현재 각 정당은 10대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청년 대상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전수빈(상경·국통 19)씨는 “교육 정책을 논의할 때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은 배제돼 왔었는데 이번 투표 연령의 확대로 일부 청소년이 본인의 의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피선거권 연령 또한 확대돼 다수의 청년 국회의원이 선출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행운(중국·중의통 19)씨는 “청년이 선거권과 같이 주어진 권리를 이행해야 권위적인 기존 국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오갈 수 있는 국회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층의 단일한 정치 문화를 타파해야 하며 청년의 목소리는 오히려 청년이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재 청년 정치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 개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코로나19에 부딪힌 우리학교 유학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의 학교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면 강의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등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지에서의 수학을 위해 유학을 택했던 우리학교 재학생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해 1학기의 △교환프로그램 현황△유학생의 상황△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우리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프로그램 현황△유학생의 상황△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우리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이번 해 1학기 교환프로그램 현황

지난해 12월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이에 여러 국가의 대학이 대면 강의를 금지하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해 2월, 국제교류팀(이하 국교팀)은 중국 소재 교류대학을 시작으로 각국 교류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교팀은 중국 교환프로그램을 취소한 후 다음 학기로 유예할 수 있도록 각국 대학과의 협의를 마쳤다. 지난달 9일엔 비자 효력이 정지되며 일본 교환프로그램이 취소됐다. 이 밖에 유럽 및 북미지역은 지난달 초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신청했던 대부분 학생이 수강을 취소했다. 한편 일부 학과는 특정 유럽 국가 교환프로그램이 취소됐을 경우 다음 학기에 파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외엔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다음 학기 상황을 예측할 수 없던 이유로 관련 결정을 보류했다. 이번 학기 우리학교의 △아너스파견△복수학위△교환스7+1파견△사비유학생 총합 취소율은 39.4%다.

◆우리학교 유학생의 상황

이번 해 1학기 교환프로그램을 신청한 777명의 중 실제로 출국한 유학생은 650명이다. 현재 이들은 △중도귀국 후 복학△중도귀국 후 휴학△중도귀국 후 현지 교류대학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수강△현지 잔류하며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상태다. 이번 달 3일 기준 174명이 중도귀국 후 복학했고 41개국에서 394명이 현지에서 잔류 중이다. 중도귀국 후 복학한 학생의 경우 수강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재학생의 수강신청은 2월 3일부터 7

로 조치했다. 배정 인원이 초과한 과목의 경우 각 학과장과 해당 교·강사의 양해를 얻어 수강신청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이중전공 교과목과 교양과목 중 이미 수강인원이 초과했고 강의실 규모가 제한된 경우 다른 수업을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해외 잔류를 포기하고 귀국 후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이번 달 3일까지 각 학과를 통해 학종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규학기로 인정되는 교환프로그램 참여 도중 귀국한 학생이 휴학을 원한 경우 등록 휴학으로 처리됐다. 우리학교에 등록해 재학 중인 상태로 해외파견을 나갔기 때문이다. 또한 7+1 프로그램을 통해 파견된 학생은 선 감면된 파견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

현지 잔류 중인 405명의 학생은 현지 대학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다. 교류 대학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를 현지에서 혹은 귀국 후 수강할 땐 이수 확인서와 성적표가 발급 가능하면 수업료도 인정된다. 또한 1~2월에 학기가 시작돼 이후 프로그램이 취소된 학생은 최대 6학점을 단기연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지난달 16일까지 일정 학점을 이수했던 현지 대학의 공식 성적표 혹은 수강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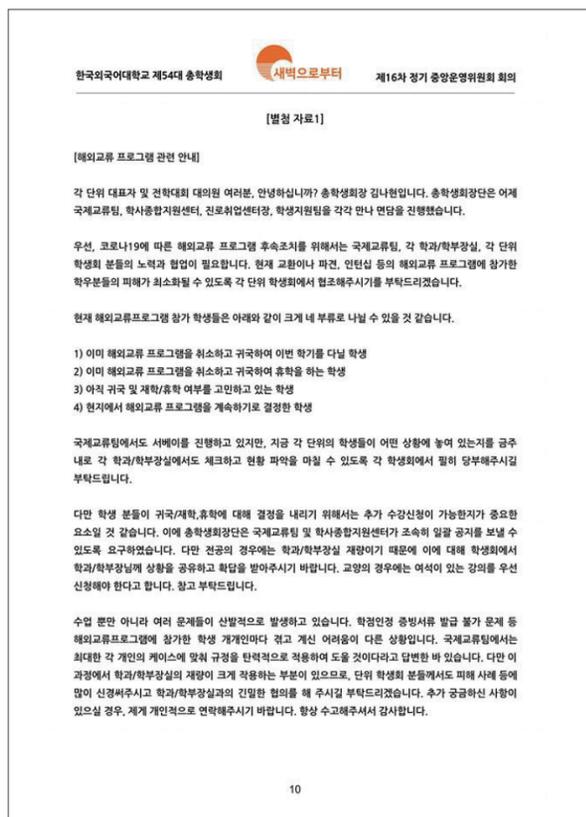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는 탄력적인 학칙 운용을 통한 특별 장학금 지급 방식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김나현(서양어·프랑스어 15)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측에서 국교팀에 건의해 학교별로 환불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박장원(자연·화학 1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교류프로그램 참가 학생의 불편사항을 취합해 국교팀에 전달했다"며 "항상 재학생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 측은 현지에서 잔류한 학생에게 지속적인 연락 및 지원을 하도록 노력 중이다.

연세대학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중국으로 유학한 학생에 한해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취소한 뒤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달 20일, 이화여자대학교는 중국 파견이 예정됐던 학생이 불이익 없이 파견 일정 연기 및 취소가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동시에 대만·홍콩과 같은 중화권 학교로의 변경을 허용했다. 이처럼 교환학생에게 신속히 공지를 전달했던 점에서 우리학교의 대응방식과 차이가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학생을 위한 선제적 대처의 필요성이 절감되는 때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 및 우리학교가 나아갈 방향

국가별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산 속도 및 양상이 달라짐에 따라 학생의 귀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의 대처 현황

일까지였다. 이에 학교 측은 중도 귀국한 학생이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직접 강의를 신청하도록 조치했다. 반면 전공의 경우 이미 배정 인원이 초과한 경우가 많아 각 학과와 협의해 수강신청이 진행됐다. 한편 앞선 기간에도 수강과목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희망 과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양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이를 토대로 지난 달 24일부터 27일까지 추가 수강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에도 수강신청을 마무리하지 못한 학생을 학과 차원에서 파악한 후 학종지에 신청할 수 있

국 시기도 다양했다. 학종지와 국교팀은 각 학과장과 교·강사에게 연락해 최대한 학생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나 수강 가능한 과목 수가 적었고 학교 측의 행정지원이 느렸던 지적이 일부 존재했다. 중도 귀국 후 복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복학 및 수강신청 처리와 관련해 '우리학교 대응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5%를 차지했다. 또한 복학 후 수강신청으로 인해 겪은 불편함으로 △교수 측의 증원 거부 △학교 측의 느린 행정지원 △수강 가능 과목 수가 적은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현지에서 잔류 중인 학생은 △마스크 품귀현상△현지 수업의 차질△생활필품 사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개인의 위생 및 안전을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에 잔류 중인 강수지(아시아·베트남어 19)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이미 4~6월 시험마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며 학점 인정 절차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한 미국에서 현지 대학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김형주(사회·미디어 15) 씨는 "비자와 관련해 학교 측에 문의했을 때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해주지 못했다"며 느린 행정 처리의 불편함을 드러냈다.

해외 학교 측의 등록금 환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귀국 후 복학하며 등록금을 이중 부담해야 할 단 문제도 있다. 이에

Lifetime Value Creator
고객의 인생에 주기에 걸쳐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겠다는 롯데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국에 남기고 싶습니다”
-효 신격호 롯데 그룹 명예회장

www.lotte.co.kr

하늘 높이
당신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순간을 같이 나누고, 깊이 성장하는 당신의 인생과 함께 가는 좋은 친구

함께 가는 친구, 롯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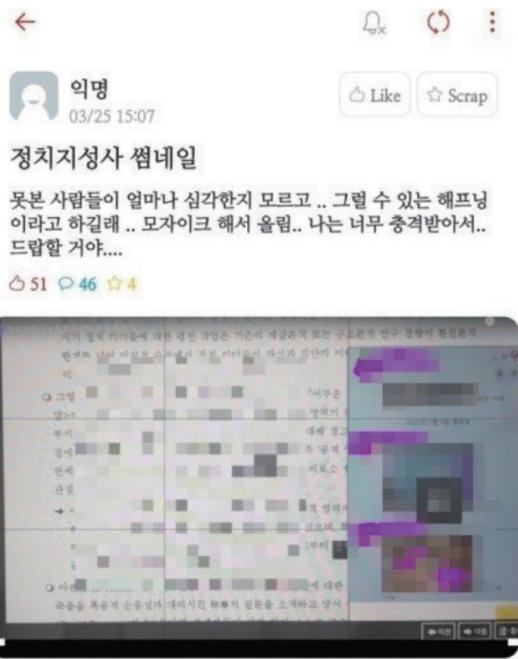
온라인 강의 중 낯부끄러운 논란, 대처는 어떻게?

지난달 25일, (한국정치지성사(이하 한정지사) 온라인 강의 중 A교수가 SNS 메시지를 통해 음란물로 추정된 영상을 전달받은 장면이 노출됐다. 이에 A교수는 이클래스(e-class) 공지사항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또한 이번 학기에 그가 맡았던 모든 수업에서 물러났다. 이후 우리학교는 성희롱등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정지사 강의 중 논란△총학의 대처와 우리학교 학생들의 입장△우리학교의 대처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정치지성사 강의 중 논란

지난달 25일,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한정지사 과목과 관련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엔 한정지사의 온라인 강의 중 담당 교수가 음란물을 전송받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A교수가 수강생에게 공개한 온라인 강의에 음란물 영상의 섬네일*이 그대로 노출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A교수는 컴퓨터 화면에 강의 자료를 띄워놓고 이를 녹화한 후 수강생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녹화된 강의 중간에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이 전송된 SNS 대화창이 나타났다. 이후 A교수는 대화창을 내린 후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A교수는 사건 당일 공지문을 통해 “어떤 오류가 발생해서 그런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자료 등록 시 녹음 과정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해 당황스럽다”며 “제 실수로 인해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교수가 사건을 단순 과실로 일축하며 자신의 책무를 회피했던 비판이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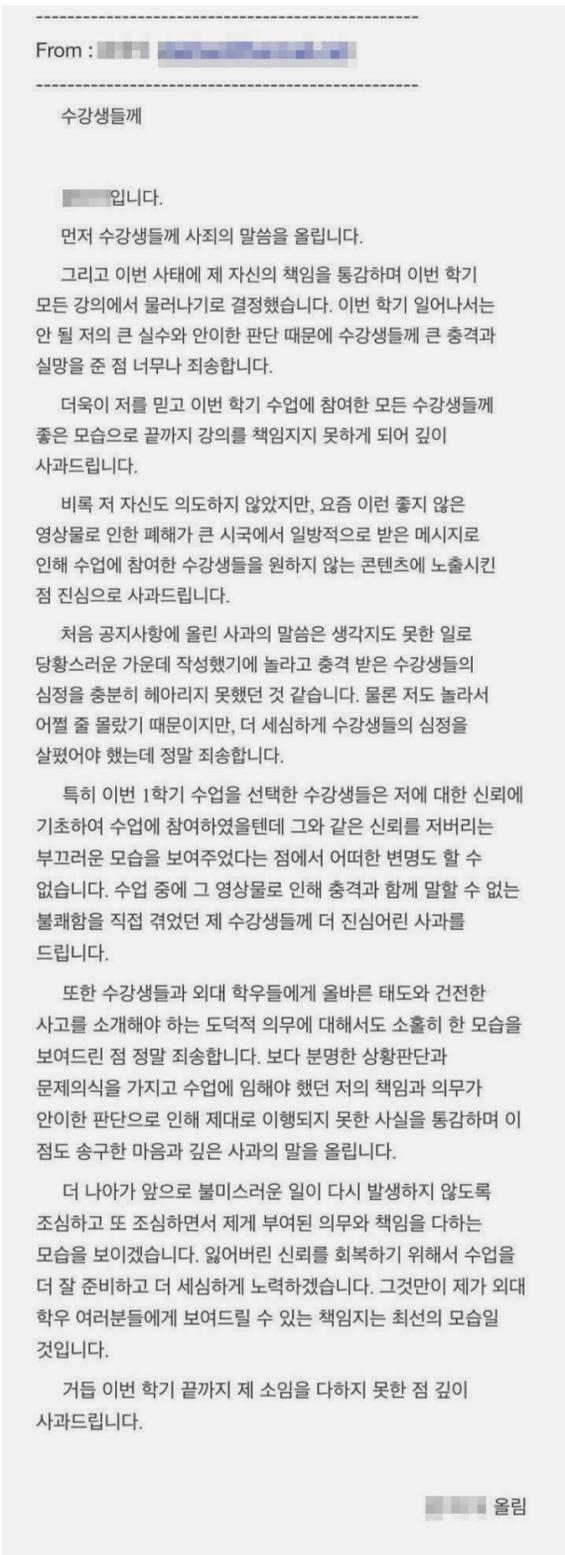


▲한정지사 과목 관련 게시물 (출처: 에타)

◆총학의 대처와 우리학교 학생들의 입장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 (이하 총학)는 공식 SNS 계정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학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학사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A교수가 담당하던 모든 강의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했다. 이어 “담당교원은 수강생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해야 했으나 시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단순 실수와 오류로 치부했다”며 “직업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의무를 방기한 해당 교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총학은 학교 측과의 면담을 통해 △A교수의 분명한 사과△한정지사 담당 교수 교체△한정지사 수강생의 수강 변경 기회 제공△A교수의 다른 강의 교원 교체△A교수 강의 수강생 수강 변경 기회 제공△A교수 수강생에게 조치사항 공지를 요구했다.

한정지사 수강생을 비롯해 이번 사건을 접한 우리학교 재학생은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해당 강의 수강생 이수빈(사회·미디어 19)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올릴 정도로 질 낮은 강의를 듣고 있던 생각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교원 대체에 대해 당황스러움을 토로한 학생도 있었다. A교수가 맡았던 미네르바 강좌를 수강한 신지윤(사범·중교 16) 씨는 “일부 강의에 새롭게 배정된 교수는 학생 사이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하다”며 “원하는 교수의



▲A교수의 사과문

강의를 듣기 위해 수강 신청 기간에 고생했지만 재학생에겐 어떠한 선택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수를 변경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총학은 한정지사 수강생에 한해서라도 수강 변경 기회를 부여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수강 취소만 가능하며 수강 변경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총학은 향후 교무처장과의 면담에서 해당 결정에 대해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SNS에서 A교수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신상 공개△사실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이준영(경영·경영 16) 씨는 “인터넷 상에 퍼져 있는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소은(상경·국통 18) 씨는 “새 사과문을 통해 A교수의 마음이 잘 전달됐다”며 “이 이상의 A교수에 대한 비방은 없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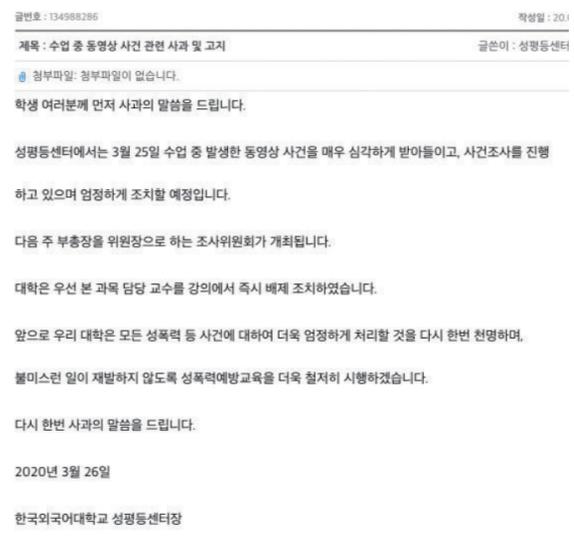
◆우리학교의 대처

지난달 26일, 우리학교 성평등센터는 ‘수업 중 동영상 사건 관련 사과 및 고지’란 제목의 공지를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에 따르면 우리학교 성평등센터는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해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후 사안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성평등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학교는 성 관련 사건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폭력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달 31일, 공지문을 통해 학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의한 규정에 의거해 조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알렸다. 동시에 피해자 진술은 SNS에 올라온 글과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글을 참고할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우리학교 성평등센터 측은 수강생 전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 진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미네르바 주임교수회의에선 해당 과목뿐만 아니라 A교수가 담당하던 모든 강의의 교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A교수에게 사과문을 다시 작성해 발송할 것을 요구했다. A교수는 새 사과문을 통해 “이번 학기 일어난 일 저의 큰 실수와 안이한 판단 때문에 수강생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준 점 너무나 죄송하다”며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받은 메시지로 인해 수강생에게 원하지 않은 콘텐츠를 노출시킨 점 사과 드린다”고 거듭 전했다. 이어 “처음 공지사항에 올린 사과문은 생각지도 못한 일로 당황스러운 가운데 작성했기에 수강생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현재 한정지사 과목을 포함한 A교수 담당 과목은 모두 다른 교원으로 교체됐다.

한편 이번 달 3일, 윤석만 우리학교 부총장을 중심으로 한 조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안건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기반으로 한 성희롱 성립 여부 판단이다. 조사위원회는 재발 방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회의 내용을 추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교수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섬네일: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영상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줄여 화면에 띄운 것



▲우리학교 성평등센터 26일자 게시물 (출처: 공식 홈페이지)

민식이 법 시행, 그 후 상황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2,509건이다. 이중 사망한 어린이는 33명, 상해를 입은 어린이는 2,612명이다. 지난해 일명 '민식이 사건'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25일 '민식이 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9일 만에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그 참가자는 29만 명에 달했다. 이에 민식이 법의 내용과 그에 대한 논란을 살펴봤다.

◆민식이 법의 발의 배경

지난해 9월 11일, 고(故) 김민식 군(이하 김 군)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포츠장에서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김 군이 건너던 횡단보도 맞은편엔 김 군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다. 이에 김 군의 어머니는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그러나 이곳에 신호등이나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어 논란이 됐다. 한편 1995년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이란 법이 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300m까지의 구역으로 주·정차가 금지되며 주·정차 속도도 30km/h 이내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신호등이나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어 단순 표지판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1일, 김 군의 아버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시 가중 처벌해 달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했다. 이후 법안이 발의됐으나 전국 스포츠장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1조 원 이상이 든단 이유로 법안 제정이 미뤄졌다. 해당 법안제정이 탄력받은 계기는 지난해 11월 19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다. 이날 김 군의 부모는 민식이 법 통과를 호소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10일,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통칭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민식이 법에 대한 논란

지난달 25일, 민식이 법은 시행 9일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이 법안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만 명에 달한 것이다. 해당 청원인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비례성의 원칙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사용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한 민식이법 바로알기 포스터의 모습

해야 한다. 즉 특정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해선 안 된다. 민식이 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와 같은 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물론 운전자가 모든 안전의무를 준수했고 무과실로 판명된다면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 판정은 매우 드물단 점에서 이는 과도한 처벌이란 것이다.

또한 '민식이 법'은 운전자의 과실과 고의를 구분하지 않는단 비판을 받는다. 우리나라 법에선 강간과 같이 고의성이 드러난 범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민식이 법은 과실에 대해서도 고의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한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법안 발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원들이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단 것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자마자 바로 통과됐다. 처벌 형량이 의원 발의안 그대로 정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원 행정처장·법무부 차관 등이 참여해 전문적 관점에서 의견을 내고 여러 요소를 반영해 조정된다. 그러나 민식이 법은 해당 과정이 생략되고 처벌형량도 조정되지 않아 부실한 법안이란 것이다.

◆전 세계의 어린이 보호구역 추세

스웨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홈(Home)존'을 도입했다. 학교 앞 도로만 규제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가 활동하는 구역 전체에 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학교 주변 도로엔 20cm 방지턱이 있어 감속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스웨덴은 연간 어린이 사망자가 10만 명당 2.5명 수준으로 세계에서 적은 편에 속한다. 미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벌칙이 2배이며 통학버스가 정차했을 때 추월할 수 없다. 또한 반대 차로의 차량도 정지하거나 감속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경고등에서 점멸신호가 들어온다. 이밖에 일본은 1972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을 도입해 △자동차의 통행규제 △제한 속도 20km/h 이하로 제한 △배치 가능한 모든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엘로카펫'을 마련했다. 이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교육부는 어린이가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안전한 위치에 머물도록 '노란 발자국'도 설치했다. 정부는 이를 우선으로 이번 해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어 2022년까지 천여 개의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가마다 대응 정도엔 차이가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0학년도 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0학년도 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20. 4. 1(수) ~ 4. 7(화)	4.25(토) 10:00	5. 7(목) 14:00	5.11(월)~ 5.15(금)
일반전형	2020. 5. 7(목) ~ 5. 13(수)	6. 6(토) 10:00	6. 18(목) 14:00	6.22(월)~ 6.26(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국내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국내의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방법: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 나.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 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 라.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n번방’ 신상공개, 개인정보와 알 권리의 충돌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동의자가 20만 명이 넘어가며 같은 달 24일엔 해당 사건의 핵심 용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그러나 동시에 n번방 사건에 가담한 26만 명 전

원에 대한 신상공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적논점을 알아보기 위해 김현수 우리학교 법학연구소 초빙연구원을 만나봤다.

김현수 우리학교 법학연구소 초빙 연구원

Q1. 일명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조주빈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한 처분인데요. 성폭력처벌법이 정확히 무엇이며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여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성폭력처벌법은 2010년 4월 15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존 법률에선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 등의 관련 사항이 함께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단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벌에 관한 사항이 분리돼 새롭게 제정됐습니다.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의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에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n번방 사건 가담자가 사법부에 의해 유죄로 확정된다면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성폭력처벌법은 △강력한 처벌△법률의 미비△보호대상의 확대 등을 이유로 17차례에 걸쳐 개정됐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새로운 법안이 이번 해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조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개정안에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Q1-1. 지금까지 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를 할 땐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 적용됐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 법의 입법목적이 달라 차이점을 설명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의 목적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습니다. 동시에 특례 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킵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신체 안전 보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Q2. 이번 사건 이전엔 어떤 기준으로 특정강력범죄법의 적용을 받아 신상공개가 됐었나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에 의거해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나이△성명△얼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할 것△법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어선 안 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땐 신상공개는 원칙적으로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 없이 기자의 취재에 의해 공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Q3. 이번 달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n번방 사건 가담자 신상공개와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때 발생할 법적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강제수사 여부는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객관적 혐의를 확보했고 이를 충분히 입증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한 용의자의 신원을 전부 확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수립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정책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 내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구입할 때 비트코인으로 지불했다면 구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란물 저장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 강제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 의거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수입△수출△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대여△배포△제공△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를 배포·제공하거나 공

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3-1. n번방 사건 가담자 신상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될 우려는 없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국민의 자유△국민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목적이 있고 신상공개를 위한 상위법 또는 특별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엔 저촉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권리인 사생활보호와 공적의무인 신상공개가 충돌될 경우 공적의무 우선 권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개인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Q3-2. n번방 사건엔 많은 미성년자도 가담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신상공개가 가능한가요?

청소년보호법 제2조1호에선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했으며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제1항 4호에 따라 청소년의 신상공개는 불가합니다.

Q4. 해외에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1994년 미국 뉴저지주의 여아가 강간·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주(州)법에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아동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일정기간 동안 주거지 및 고용변동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미국 연방법은 존재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선 아동성범죄자의 주거지에 ‘성범죄 전과자’란 표지판을 붙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1997년에 제정된 성범죄자법을 따릅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등록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일본엔 이런 신상공개제도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 시 반드시 실명을 공개토록 하고 있어 신상공개제도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실명공개가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던 단점이 있습니다.

Q5. 이번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신상공개가 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관련 부처는 적법성을 검토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듯합니다. 다만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제2차적 형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여부△공개대상△공개범위를 보다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신상공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운영이 요구됩니다.



외대학보를 만나기까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며 '언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주춧돌 중 하나로 없어선 안 될 존재란 걸 배웠다. 그러나 다소 거리감이 느껴졌고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저 공부가 싫어 TV 앞에서 버티다 항상 저녁 9시 뉴스까지 보고 숙제를 시작했던 게 기억난다. 부모님께서 지면 신문을 구독해놓으셔서 집 한쪽엔 신문이 쌓여있었지만 준비물로 들고 갈 때 빠곤 만져본 적이 없었다. 당시 학교와 집의 경계를 벗어난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가진 건 아이돌뿐이었다. 이렇게 무리한 일상 속 이따금 소소한 일탈도 하며 중학생 시절을 마무리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당시엔 고등학생 본분에 심취해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학년 2학기에 '최순실 국정농단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나 이와 성별을 불분하고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국회는 서둘러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3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이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때 느꼈던 감정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히진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을 쫓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들의 고발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던 사실을 직시하게 됐다. 동시에 우리나라 언론이 부패했던 인식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움직여야 할 의무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언론인으로서의 꿈을 그렸던 적은 없었다. 심지어 대학에 학보 사관 언론기구가 있던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라마 '청춘시대'를 보고 알게 됐다. 대학생이 되고 학교에 다니면서 건물 곳곳에 배치된 외대학보를 발견했고 하룻길에 동기와 함께 꼭 한 부씩 챙겨가는 독자가 됐다. 기사를 읽으면서 학보 기자가 된다면 17살에 했던 다짐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한때 품었던 열의 하나만으로 무모하게 학보사에 지원했고 운이 좋게도 그 일원이 됐다.

두 번의 마감을 통해 한 호가 완성되기까지 상상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단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학보사의 모든 기자는 조금이나마 더 좋은 질의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건을 취재해 기사 본문을 작성하면 수정작업을 거쳐 신문이 완성된다. 지난 1040호 우리학교 회계 논란 관련 기획기사의 경우 작성한 기사의 한 문단이 삭제됐다. 중립을 유지하며 전달해야 할 사실을 담았다고 생각했기에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해당 기사를 통해 독자는 사실을 전달받고 그와 얽힌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졌길 바란다.

학보 기자로서 아직 서툰 일도 있지만 학보사에 지원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도전이 두려워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면 대학을 다니면서도, 졸업한 후에도 학보에 대한 미련이 한가득 남았을 것이다. 모집 마지막 날, '떨어지더라도 일단 한번 담벼보자'고 생각하며 고민 끝에 지원했던 내 자신을 칭찬한다.

김미정 기자



박상영의 이물감 [박상영 작가의 '재희'를 읽고]

당사자성*이 대체다.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의 공천만 봐도 그렇다. △여성성△장애인△청년 등이 국회의원 후보 또는 비례대표로 지목됐다. 학벌 좋고 부족함 없는 사람들의 정치에 국민이 지친 탓이다. 이제 국민은 자신과 공감대를 이루는 '진짜' 약자가 현실 정치에 투입되길 원한다. 박상영 작가(박작가)의 연작 소설집 '대도시의 사랑법'이 주목받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 있지 않을까. 박 작가는 소설집 전체의 화자를 게이로 설정한다. 동시에 화자에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과감한 시도를 한다. 박 작가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힌 적은 없지만 이런 시도는 그의 소설에 매력을 더해준다. 독자는 상상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끈 소설은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이다. 하지만 필자는 단편소설 '재희'를 소개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더 강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소설 속 재희와 '나'는 대학동기다. 우연한 기회에 친해진 둘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동거를 시작한다. '나'는 동성애자고, 재희는 여자다. 소설은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두 명이 연대하고 멀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소설은 전반에 걸쳐 두 젊은이의 '방탕한' 생활을 그리고 있다. 여성과 게이 성적 방향이 유쾌하게 녹아 있지만 여전히 낯설다. 우리나라엔 낯은 사고방식을 답습한 소설이 많다. 그런 소

설 속에서 흔히 남자는 여자를 강간하거나 폭행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행위는 '사랑의 미묘함'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적 코드의 재조합' 등으로 읽히며 미화된다. 하지만 이는 틀렸다. 폭력의 묘사는 폭력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이런 문학 지형 속에서 박 작가는 독자에게 의도적으로 이물감을 전한다. 이로 인해 소설을 읽다가 멈추는 순간 독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실제로 박 작가는 "성매매 소설은 예술로 받아들이면서 쿨어는 이상하게 보는 거부감적 감각이 이해 안 돼요"라고 말한 바 있다.

새로운 세대라고 불릴 만한 젊은 작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유가 덕지덕지 묻어있지도, 거대한 세계관을 설정하지도 않은 직관적인 소설을 쓴단 점이다. 이들이 가장 큰 무기는 진정성이다. 박 작가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방방 돌리거나 무겁게 잡으며 탄식하지 않는다. 이 도시의 상처를 손수 벌러 독자에게 보여준다.

*당사자성: (문체적인) 특정 사안과 직접 관련된 당사자로서의 정체성.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더 랍스터'를 보고 감정을 강요하는 세상]

연애나 결혼은 개인의 의지로 선택해야 하며 어떤 강요도 있어선 안 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야 하는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선 종종 사랑이란 개인의 감정을 관습적으로 강요하곤 한다. 어느 순간 연애는 필수가 됐고 결혼은 통과의례가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해야 한다.

영화 '더 랍스터'는 커플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의 이야기다. 최근 이혼한 데이비드는 호텔에서 45일간 머물며 짝을 찾아야 한다. 짝을 찾지 못한 사람은 동물로 변하게 된다.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드는데 여전히 짝을 찾지 못한 그는 숲으로 도망친다. 숲은 이런 사회에서 도망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이곳의 유일한 규칙은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데이비드는 숲에서 짝을 찾게 된다. 하지만 숲의 지도자는 그 둘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그 별로 여자의 눈을 멀게 한다. 결국 데이비드는 그녀와 함께 살기 위해 도시로 떠나게 된다. 결국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고 믿던 그는 자신의 눈을 찌르려고 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 속에서 호텔은 짝을 이뤄야만 하는 사회다. 반대로 숲은 이성간 사랑이 배제된 사회다. 두 사회에선 각각 극단적인 하나

의 선택지만 주어진다. 사랑에 대한 개인의 자유가 배제된 공간인 것이다. 호텔과 숲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각각의 사회 규범에 순응한다. 호텔에서선 억지로 남녀가 대화를 이어가고 숲에선 지나칠 정도로 남녀의 접촉을 피한다. 이처럼 영화에선 사랑이란 감정은 하나의 규범처럼 여겨지곤 한다. 이는 실제 사회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부각해 우리가 사는 이곳을 되돌아보게 한다.

물론 실제 사회에선 영화처럼 짝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동물로 변하진 않는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주변의 시선은 존재한다. 짝을 짓지 않는 것을 남몰래 다르단 이유로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규정짓고 이를 암묵적으로 강요한다. 감정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다. 이 영화에선 극단적인 설정을 통해 감정을 규범인 마냥 통제하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기이한 호텔과 숲에서의 인물을 통해 자유 의지로 감정을 갖는 인간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했다. 현대사회가 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할 시점이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1041호 학보를 읽고 외대학보를 마주하며

한영준(상경·국통 18)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41호를 정독하고 처음 받은 느낌은 '외대답다'였다. 아랍어과 학생의 토론타고 수상과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학회원의 세크어 시집 출간 소식을 담은 보도기사는 오로지 외대학보에서만 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란 우리학교의 슬로건을 떠오르게 했다. 동문인 최성은 번역가와 인터뷰는 졸업 후 세계로 뻗어나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오는 듯했다. 이처럼 1041호의 기사는 우리가 각자 생활하며 있고 있었던 '외대생으로서의 자아'를 깨워줬다. 이런 요소가 일반 신문들과 차별화되는 학보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1041호는 앞서 언급한 보도기사뿐만 아니라 기획 기사를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했다. 기획 기사에서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 취소와 원격강의 시스템 도입 등 학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다뤄 더욱 흥미로웠다.

우선 3면의 새터 기획 기사는 새터의 △취지△의의 △기존의 문제점을 짚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엔진을 점검할 수 없듯 교내 행사가 잠정 중단된 현시점이 기존 행사 제도의 문제점을 짚을 적절한 시기다. 하지만 마지막 문단에서 인권 문제를 언급할 때 안전

문제와 구분해서 서술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8면의 사회문화기사는 지난해 11월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거쳐 국무회의에 이르기까지의 진행 과정을 차근차근 전달했다. 이런 서사적 서술로 사건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고위 공직자들의 물리적 발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실질적 대응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논란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까지 내보이는 수준 높은 글이었다.

1041호의 모든 기사는 사회 상황을 고려해 주제를 선정하고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시사성과 객관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행동의 제약이 커짐에 따라 이

1041호 학보를 읽고 외대학보, 소란스러운 사회를 바라보다

김현서 (통번역·영어 19)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치달으며 국내외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재학생은 전례 없는 학사과정의 변동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사건을 전달한 모든 외대학보 기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1면에 재학생이 집중하고 있을 강의 관련 문제에 대한 기사를 실음으로써 이목을 집중시켰다. 4면에선 원격강의 시행으로 텅 빈 캠퍼스의 사진 자료가 실렸다. 하지만 비슷한 사진 자료는 이미 1면에 첨부됐다. 우리학교 원격강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사진 자료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어 원격강의로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을 설명한다. 타 대학 이공계열 단과대 학생을 인터뷰했는데, 재학생을 인터뷰했으면 더 와닿았을 것이다. 또한 등록금 인하 및 환급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3면 새내기 배움터 관련 기사에 2017년 사례가 언급됐는데 이후로 입학한 학생을 위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2면에서 우리학교의 기부금 전달 소식은 삭막한 상황에 따뜻한 힘을 더했다. 삼시간에 모금액을 달성해 자랑스럽다. 5면에선 사이버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이버 종교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전 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이어 눈에 잘 들어오는 그래프를 첨부해 신뢰도를 높였다. 실제 우리학교 학생이 사이버 종교 전도 활동을 당한 경험을 언급해 공감을 유

도한 점이 인상 깊다. 7면의 교내 쓰레기 문제 기사에선 쓰레기 없는 교내 풍경과 잘 정돈된 쓰레기통 사진만 첨부했다. 이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엔 부족하다. 기사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면은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을 다루고 있다. 최근 가해자에 대한 지나친 서사구조를 만드는 것을 지양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기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건 자체에 집중해 사건 전개 과정과 정부의 대응책을 담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관련 기관의 대응과 대중의 반응만으로 사회의 변화를 논하는 것은 비약이라 생각한다. 9면에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응으로 위기를 맞은 금융시장을 담았다. 한 면 전체를 장식하는 인터뷰 내용과 사진 자료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줬다. 다수의 전문 용어가 등장하는 분야라 자칫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및 금융 관련 기사에 주석을 다는 등의 설명과 조연을 가미해 긴장감을 해소했다.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현 시기에 많은 사람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언제까지 연장될지 모르는 원격 강의에 재학생은 답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외대학보는 재학생의 소통 창구가 돼줘야 한다.



국·부장 고정칼럼

그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n번방 사건'은 많은 이를 충격에 빠트렸고 일명 '민식이 법'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의해 시행된 우리학교 원격강의로 재학생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뒤엉킨 우리의 △불안△분노△혼란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

부정적 감정의 연쇄는 우릴 쉽게 무기력에 빠지게 한다. 혹자의 말대로 포기하면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찰나의 회피일 뿐이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 했다. 때문에 우린 '그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잘 연소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다.

이번 달, 우리 모두가 그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투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현실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사회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정치다. 앞서 n번방 사건이나 민식이 법이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사회적 관심에 정부가 응답한 것이다. 또한 제도 변화의 실질적 힘을 가진 건 입법부인

국회다. 그리고 이곳의 구성원은 유권자인 국민에 의해 채워진다. 이에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건 스스로 주체이길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악순환의 시작이다. 무관심이 이어질수록 논의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그림 또다시 무관심해진다. 그래서 우린 그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으면 안 된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둔다는 건 동시에 내 미래를 생각하는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게 만들지 결정하는 것이 정치다. 앞으로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는 이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그 관심이 행동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큰 기회는 이번 달 15일에 있다.

허지나 부장 99_jina@hufs.ac.kr



코로나19 위기와 공생(共生)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정부도, 기업도, 학교도, 가정도, 개인도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다. 비행기가 다니지 못하니 지구의 대기질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도 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19로 고전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신종 감기 바이러스다. 많은 과학자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이제는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 될 수 있다. 인류는 전염병의 경험을 해왔던 역사가 있다.

아테네 몰락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흉역이었다. 아테네가 멸망한 마지막 5년 동안 전쟁보다 흉역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다고 한다.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이 흉역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디면서 천연두 바이러스가 전해지게 되었다. 바이러스로 인해 아메리카 원주민의 95%가 목숨을 잃었다.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손쉽게 점령한 것은 이러한 이유였다. 1918년에는 스페인에서 발생한 독감 인플루엔자가 선원들에 의해 전 세계로 퍼지면서, 3억명 이상이 감염돼 무려 2,000만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한다. 1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가 1,5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쟁보다 많은 수의 사람이 이 독감으로 희생된 것이다. 1957년의 아시아독감은 1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968년의 홍콩독감으로 80만명이 사망했다. 1977년의 러시아독감 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 후 일주일 이내에 90%가 사망한다. 1976년 6월 수단에서 '에볼라 출혈열'로 284명이 감염되고, 151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1995년 콩고에서 다시 발생해 244명의 사망자를 냈다. 1996년에는 가봉에서, 2004년에는 콩고에서 또 출현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하라 사막 이남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10여 차례 이상 유행했고,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는 일명 니파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57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그 가운데 100명이 사망했다. 식육용 돼지에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이 알려져 수많은 돼지들이 도살됐다.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한 신종 페르민 사스(SARS)는 전 세계로 확산되어 30여 개국에서 8,000여명을 감염시켰다. 사스는 감염속도가 빠르다. 몇 달째 수백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지금처럼 전 세계에 유행했다. 비슷한 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세기 네 차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다고 한다. 이것이 다시 급세기에 신종 바이러스(H5N1)로 나타난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갈수록 세지고 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또 바이러스는 항상 변종들이 나타난다. 아직 인류가 만나지 못한 수백만 이상의 바이러스들이 미지의 원시림에 남아있다. 이들은 언제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이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다.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해도 곧 다시 우리는 새로운 돌연변이를 만나게 될 것이다. 감기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예다. 감기 바이러스를 100%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 그저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감기에 걸리면 증상을 악화시키는 약을 먹거나 쉬면서 견뎌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지구에 사는 '공동체'다. 가이아(Gaia) 이론에서는 지구가 어떤 조건들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한다. 지구는 지구생명을 유지하는 일정 비율의 조건들에 불균형이 생기면, 그 생존의 최적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조정하며 변화한다는 것이다. 급세기에 지구생명의 최적조건이 되는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에 방해가 되는 생명체는 인간이 아닐까? 지구는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다. 인간은 수많은 존재자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인간은 이 하나의 공동생명장에 사는 하나의 존재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연생태계를 배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급속한 개발과 산업화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지금이라도 인간과 동물 그리고 바이러스를 포함한 지구 전체가 공생(共生)하는 견դ한 시각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인류가 가졌던 공생의 지혜를 앞으로 모색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이 위기가 결국 인류의 몰락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 위기로 우리 인류가 공생과 배려와 사랑의 지혜를 되찾기 바란다. 우리는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닐까?

·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7didu@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김나현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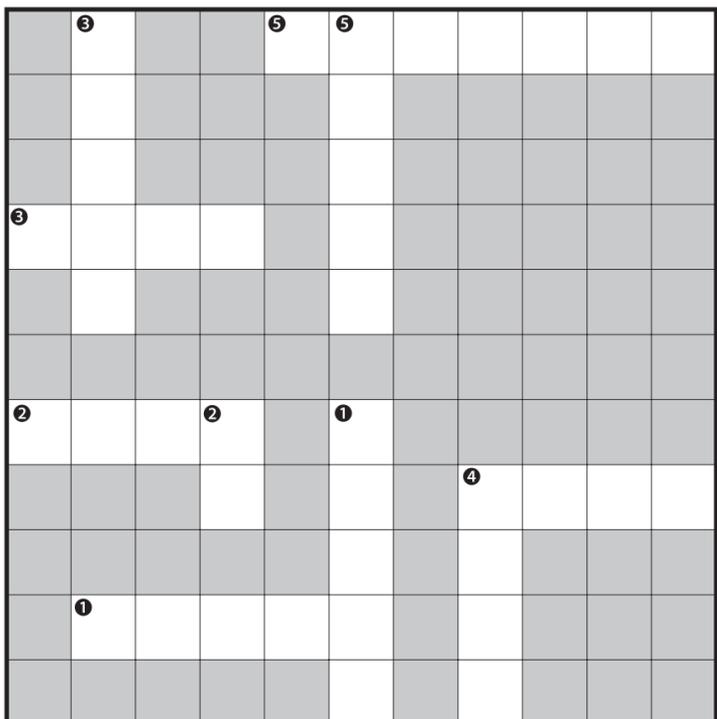
한줄명...

외대학보 기자들의 한줄 기사

- 김나현:** 투표합시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 김미정:**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연수:**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 이상우:** 우리나라 영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 이서미:**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준성:** 우리 손으로 우리 권리를 찾는 총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조미경:** 코로나19의 여파, 우리 사회·학교의 취약점을 들춰내고 생각합니다.
- 조하영:** 코로나19로 해외에서 불편함을 겪는 우리학교 유학생을 응원합니다.
- 조현수:** 기본을 지키는 수업을 듣고 싶은 게 욕심이 아닐지 바랍니다.
- 최민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 허지나:** 곳곳에 꾸준하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십자말풀이



- 가로**
- 파리 개신교는 ○○○○의 대표적이다.(6면 참조)
 - 호국영령 및 ○○○○(8면 참조)
 - 영화 '더 랩스터'의 주인공 이름은 ○○○○(10면 참조)
 - 지난달 설렘 총학은 ○○○○ 사업 계획을 알렸다.(2면 참조)
 - 온라인 강의 중 A교수가 SNS 메시지를 통해 음란물로 추정된 영상을 전달받은 장면이 노출됐다.

- 세로**
- 의 대학생활(2면 참조)
 - 세 대학 총학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교통△문화△○○△안전 등 6개 부문의 학생 요구안 세부 사항을 게재한다.(3면 참조)
 -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권한대행 'Swith'은 공동으로 프로젝트 '동대문구, ○○○○(4.15): 총선, 정년의 물음에 답하라'를 기획했다.(3면 참조)
 - 2016년 우리학교 학생들은 10개국어로 된 '2016 ○○○○ 국정농단 사태 규탄 시국 선언문'을 낭독했다.(3면 참조)
 - 이번 해 2월, ○○○○은 중국 소재 교류대학을 시작으로 각국 교류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갔다.(4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전화번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 김은경 우리학교 교수를 만나다

이번 해 1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다. 이에 금감원 내의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이번 달 4일, 신임 금소처장(직급 부원장)에 김은경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김 교수)가 임명됐다. 금감원 부원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한 금융시장을 목표로 하는 김 교수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법학과에 진학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엔 법과 거리가 있는 언어학과에 입학했지만 판사란 고교 시절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마친 뒤 학교를 자퇴하고 재수를 해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에 전 독특하게도 1984년에 우리학교 서양어대에 한 번, 1986년에 우리학교 법대에 다시 한 번 입학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법학과 진학은 제가 인생에 잘한 일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Q2. 대학 생활 중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나요?

우리학교 사법고시반인 '의향재'의 일원이 돼 사법시험을 준비했지만 난관이 많았습니다. 변명 같긴 하지만 어머니를 일찍 여윈 장녀로서 살림과 함께 고시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지도교수의 조교 생활을 하며 학문의 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도교수의 독서와 연구 습관을 배우고자 책을 부단히 읽었습니다. 또한 학문적 확장을 위해 독일에 유학을 가기로 정한 후부턴 주한독일문화원을 다니며 독일어 실력을 쌓았습니다.

Q3. 그동안 맡아온 직책이 많은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 가장 인상 깊었던 때와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 분과의 공정경제 영역을 맡았던 때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특히 이때 만났던 훌륭한 경제학자와의 치열한 토론과 현장점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는 제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넘게 강사 생활을 했습니다. 강사를 맡은 새내기 학자일 때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자체로 매우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이 발판이 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로 하게 됐고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업무를 맡아 깊이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정업무로 통해 다양한 금융 사안을 접했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 옴부즈맨*으로서 사회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그림자 규제**를 건어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매각 소위 위원으로서 금융시장의 귀중한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고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Q4.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의 주제가 보험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법을 전문으로

하며 여러 법적 분쟁을 맞닥뜨렸을 텐데, 이를 조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제 연구논문의 주제는 보험법인에서도 소비자보호입니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최초로 보험소비자를 법률 용어로 쓰기도 했습니다.

사업자는 조직이 있어 자체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



▲김은경 신임 금소처장

지만 소비자는 자신을 보호할 만큼의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사업자와 소비자는 동일한 힘을 가진 상대가 아닙니다. 특히 무형상품을 거래하는 금융 분야에선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통상적으로 금융거래는 약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약관 자체가 금융상품의 내용인데 그 약관을 만드는 자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내용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정보 비대칭 관계가 형성되고 협상력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관계를 조정해야 기술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며 협상을 할 때 소비자의 지위가 열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정보 비대칭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가장 고려합니다.

Q5. 금감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검사결과에 따른 제재△금

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입니다. 그 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곳이 금융소비자보호처입니다.

2012년에 금소처의 근거법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이 발의됐습니다. 이후 8년 뒤인 지난달 5일에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범이 체계화됐습니다. 따라서 금소처장이 된 제겐 해당 법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Q6. 금감원 금소처장으로서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블랙 컨슈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소비자가 없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상생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멸하는 관계라 생각합니다. 상호 호혜적 관계가 유지될 때 사업자와 소비자는 시장의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소비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 중 하나가 블랙 컨슈머입니다. 보험의 경우 블랙 컨슈머가 많으면 이들의 부당한 이익은 사업자의 손해 또는 비용이 됩니다. 이에 손해를 떠안지 않으려는 사업자는 그 피해를 선량한 소비자에게 전가하곤 합니다.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에 블랙 컨슈머는 허용돼선 안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등 소비자가 손해 입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거래 관계를 잘 살피고 악성 민원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Q7. 앞으로의 개인적 목표와 공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개인적 목표는 정의와 공정입니다. 소비자 보호는 공정한 가치 아래에서 경제정의를 이루는 한 축이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향한 사업자의 애정이 소비자의 구매와 사업자의 이익을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체계를 만듭니다. 특이한 외부적 요인이 없다면 이 순환체계는 상호적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공정한 규칙을 지키며 서로를 이해해야 정의로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로 가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개인적인 목표와 금소처장으로서의 공적 목표는 같은 선상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으로서의 목표와 금소처장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간 학자로 했던 주장 중 현실적으로 고려됐어야 하는 점과 앞으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 숙고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에 전력을 기울여 성숙한 금융시장 도달이란 목표를 견지해 갈 것입니다.

Q8. 법, 금융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는 우리 학교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전 우리학교에서 상법을 가르쳤습니다. 상법에 △보험법△상행위법△해상법△회사법 등의 개별영역이 있습니다. 30년 전 이 중에서 보험법을 제 학문적인 영역으로 선택했습니다. 상법에 속해있는 대다수가 회사법을 주전공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제 선택을 지금의 사회적 용어로 표현하면 '역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에게 역발상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법학과 진학이 인생에서 잘한 두 가지 중 하나라면 나머지는 나쁜 보험법을 주전공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금융의 특성을 한 단어로 정의하긴 쉽지 않습니다. 금융은 생물과 같은 무형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은 그 자체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규제적 요소△수리 공학적인 측면△시대상 역시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파생하는 범위가 매우 넓고 다채롭습니다. 이때 금융과 법을 접목하면 상승효과가 발생합니다. 법, 금융 분야의 전문가가 목표인 학생은 관련 서적을 손에서 놓지 말고 경제 현상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옴부즈맨: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 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
**그림자 규제: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 규제를 하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블랙 컨슈머: 보상을 노리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소비자를 뜻하는 표현